

중견기업 정책 브리프

MIDDLE MARKET ENTERPRISES POLICY BRIEF

FOMEK

vol.10 2022.10.1.~ 10.31.

*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

정책활동

- 최진식 중견련 회장-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대담 (10.28)
 -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대담을 통해 건설적인 노사 협력을 위해 갈등보다 화합을 도모하는 숙의와 대타협의 장으로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할 당부

정책동향

- [환경부]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간소화 서비스 (10.10)
 - 통합관리사업장*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·관리사항의 중복입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환경허가시스템**에 “입력 간소화 서비스” 도입
 - * 발전소, 철강, 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형사업장으로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
 - ** 대기 등 통합허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
- [산업통상자원부] 산업기술혁신펀드 신규 조성 (10.12)
 - R&D 자금 전담은행인 기업은행(600억원), 신한은행(400억원) 출자금과 R&D 지원펀드에 기투자된 정부출자금 회수액(500억원) 등 1,500억원을 모출자로 총 4,2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예정
- [산업통상자원부]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(10.13)
 -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사용 확대 및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「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」 발표
 - (주요내용) ▲차세대 바이오디젤 도입 및 의무혼합비율 상향(30년 목표 : 5.0% → 8.0%), ▲바이오항공유 및 바이오선박유 국내 도입 추진, ▲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 개발 추진 등
- [기획재정부] 제10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(10.18)
 - 새정부 첫 번째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「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정책방향」 등 총 5개 안건*이 논의·확정

* ① 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정책방향, ②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, ③ 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, ④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, ⑤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

- 기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, 주력산업 중심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對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으로 확장하여 150개로 확대·개편하고,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 중점 추진 예정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 (10.24)

-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*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, 사업화,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예정

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자동차, 전기전자, 기계금속, 기초화학, 바이오

●● [관계부처 합동] 탄소중립·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(10.26)

- 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 출범과 함께 「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」 및 「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」 발표

* (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) ▲원전·재생에너지와의 조화, ▲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, ▲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 12대 과제
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) ▲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, ▲범부처 통합형 R&D 예산분배 조정체계 도입 등 12대 과제

입법동향

1 정부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오존층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10.11)

- 수소불화탄소(이하 “HFC”) 감축 이행을 위해 특정물질 정의에 HFC를 추가하여,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HFC-23*에 대한 ‘최대한의 파괴 의무’를 담은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

- (주요내용) ▲특정물질(오존층파괴물질) 정의에 HFC추가, ▲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등

●● [산업통상자원부]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10.11)

-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(ESS) 등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,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

- (주요내용) ▲안전성검사 의무, ▲안전성검사 표시, ▲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, ▲사용후전기 관련 정보공유 요청 근거, ▲안전성 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

●● [공정거래위원회]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(10.17)

- 사모집합투자기구(PEF, 사모펀드)에 대한 추가 출자, 벤처·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 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「기업결합 심사기준」 및 「기업결합의 신고요령」 개정안 행정예고(‘22.10.18~’22.11.7)

- [공정거래위원회]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(10.17)
 - ▲안전지대 기준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, ▲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「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」 개정안 행정예고('22.10.18~'22.11.7)
- [기획재정부]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 발의 (10.17)
 -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로 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(이하 “공급망 기본법”)」 제정안 발의
- [국토교통부]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(10.17)
 - 올해 12.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용 화물차·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·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「유료교통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- [산업통상자원부]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(10.25)
 -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‘사업장의 국내 신설·증설’ 범위가 확대되어,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신·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신규·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

2 국회

-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석기 의원, 10.6)
 -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표준세율의 50%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삭제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 의원, 10.14)
 -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상향조정된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과 연계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*
 - * (현행) 중견 8%, 중소 16% → (개정안) 중견 10%, 중소 20%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영 의원, 10.17)
 -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조정금액의 3%를 법인세에서 공제
-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(강기윤 의원, 10.7)
 -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가 종합정책을 수립하여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, 디지털·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
-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 의원, 10.11)
 -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시 기존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모회사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

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 의원, 10.11)
 - 회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5년 단위 공급망 계획 및 회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
-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전화 지원 기본법안 (류성걸 의원, 10.14)
 -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, 세제, 금융 등의 지원 체계 마련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 의원, 10.12)
 -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판매한 1회용 컵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를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로 간주
-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재 의원, 10.14)
 - ‘지역본사 사업’ 및 ‘지역본사제 기업’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, ‘지역본사제 기업’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규제 개선 신청, 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 마련
 - * (지역본사 사업)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(본사)를 이전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와 유사한 규모의 지사를 신설하는 등의 사업
(지역본사제 기업) 지역본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-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 의원, 10.17)
 -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,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의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여부 등의 다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함
-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영 의원, 10.17)
 -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‘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’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